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무엇을 담고 있나

# 정부와 언론관계 더 투명해져야 합니다

기자실에 대해서 아십니까?

부처 출입기자단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매우 폐쇄적이고 배타적으로 운영되면서

권언유착이 싹텄던 곳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2003년 기자실의 문을 확 열었습니다.

개방형 브리핑제도의 도입입니다.

그러나 낡은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울타리가 그만큼 견고했던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신생 언론사·인터넷 매체 등 어느 언론사나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기회가 넓어져 국민의 알권리도 커집니다.

이제 우리의 취재지원시스템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 취재지원시스템이 선진화됩니다

### 정보접근이 쉬워져 국민의 알권리가 커집니다

합동브리핑제도가 확대되면 지방언론이나 인터넷·신생 매체의 정보접근 기회가 더 넓어 집니다. 지금과 같은 획일적 취재 환경이 개선되면 언론의 다양성이 실현되고, 국민의 알 권리도 더 커집니다.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브리핑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취재기회가 다양한 매체로 확대돼야 합니다

2003년 출입기자제를 폐지하고 취재 문호를 개방하는 ‘개방형 브리핑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정부와 언론관계가 투명해지는 등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낡은 관행이 아직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느 언론사든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도록 개방형 브리핑제도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 브리핑 내실화, 정보공개 확대가 필요합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보다 충실한 정책정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보화 환경에 맞는 취재지원 서비스 요구도 높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브리핑 내실화와 함께 전자브리핑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자나 국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가능해집니다.

### 취재시스템도 글로벌 스탠더드가 돼야 합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부처마다 기자실을 두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자가 정부기관을 무단출입할 수 있는 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언론은 낡은 취재관행에서 벗어나야 하고, 정부의 취재지원은 지금보다 확대돼야 합니다.



# 국민의 알권리가 확대됩니다

## 브리핑센터가 확대되어 취재지원 서비스가 향상됩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운영중인 합동브리핑실을 권역별 합동브리핑센터로 확대 개편합니다. 이에 따라 위치와 브리핑 수요를 감안해 8개 부처의 브리핑룸은 권역별 합동브리핑센터로 기능을 이전합니다. 전자브리핑제도를 통해 정보화 환경에 걸맞은 첨단 정보제공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정보공개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분	현행	개선	기대효과
브리핑실	21개 설치(합동 7개, 부처 14개)	15개 설치(합동센터 9개, 부처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브리핑실 운용 효율화</li> <li>범정부적 종합취재지원 서비스로 정보접근권 강화</li> <li>신규·군소 매체 취재 기회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동브리핑실(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청사(총리 1개, 행정 2개)</li> <li>과천청사(경제 2개, 사회 1개)</li> <li>대전청사(1개)</li> </ul> </li> <li>개별부처 14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치와 브리핑 수요를 고려해 8개 부처 브리핑실을 합동브리핑센터로 이관(외교부·건교부·문화부·정통부·해수부·국세청·방사청·예산처)</li> </ul>	
기자실(송고실)	20개(합동송고실 6개, 부처 14개)	9개(합동 3개, 부처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청사, 과천청사 합동브리핑실에 300여석의 송고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 140여석, 과천 170여석</li> </ul> </li> <li>국방부·금감위 등 개별청사에 300여석 송고실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송고실 운용 효율화</li> <li>폐쇄적 출입기자실화 관행 해소(개방 확대)</li> </ul>
방문취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절차에 따라 사전 약속 후 취재 원칙</li> <li>사무실 무단출입으로 사전 약속 관행 미정착(청사출입증 교부기자 1,400여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 원칙대로 사전 약속 후 취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원 업무수행 정상화</li> <li>취재관행 선진화(선진국은 절차에 따른 사전 약속 관행 정착)</li> </ul>
운영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쇄적 출입기자제 관행 잔존(신규·인터넷 매체 등 참여 제한)</li> <li>출입부처 중심의 취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방형 브리핑제 본래 취지대로 운영</li> <li>신규·군소 매체에도 참여 기회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개방으로 언론 출입범위 확대</li> <li>현장 취재 등을 통한 보도의 다양화, 국민의 알권리 확대</li> </ul>
취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브리핑, 인터뷰, 전화취재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브리핑, 인터뷰, 전화취재는 현행과 동일</li> <li>전자브리핑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넷으로 브리핑 실시간 중계, 개별취재 질의·응답 서비스 제공</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재기회 및 정보제공 확대</li> <li>지방지·인터넷 매체 등에도 취재 편의 확대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브리핑 횟수에 비해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 제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의·응답 중심의 브리핑</li> <li>브리핑 충실도 기관평가에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와 국민·언론간 쌍방향 소통 확대</li> </ul>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극적 취재지원 및 정보제공에 대한 비판 제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극적 취재지원토록 구속력 있는 취재지원 지침 마련</li> <li>정보공개법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추진중</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론 취재지원 강화</li> <li>정보공개 확대로 국민의 알권리 신장</li> </ul>



## 쟁점 Q&A

# 모든 언론에 자유로운 취재가 허용됩니다

### Q. 5공화국의 언론 통폐합을 떠올리게 하는 新언론통제다?

- 합동브리핑센터 설치가 '언론통제' 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 이 방안은 통폐합이 아닌 합동브리핑센터를 확대·개편하는 것입니다.
- 2003년 도입한 개방형 브리핑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해외 사례를 토대로 한 '글로벌 스탠더드' 에 맞는 시스템입니다.

### Q.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 이 방안은 취재문호를 넓혀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출입기자제 관행은 오히려 정부·언론간 유착을 조장할 가능성이 큼니다.
- 정부와 언론관계가 투명해져야 비로소 국민의 알권리가 신장됩니다.
  - ※ 기자실 운영 국가의 언론자유도 순위(국경없는 기자회, 2006년 발표) : 한국 31위, 이탈리아 40위, 일본 51위, 미국 53위

### Q. 기자들의 취재자유를 침해한다?

- 기자들의 절차에 따른 사무실 출입과 취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다만, 기자들의 사무실 무단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선진국 어느 나라도 사무실 무단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Q. 기자실을 없애자는 것 아닌가?

- 취재편의를 위해 언론사별 송고석과 공동 송고석을 제공합니다.
- 기자실을 군소·신생 매체에도 개방하고 취재지원을 위해 명실상부한 송고실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 일본 등 몇 개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자실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 ※ 정부 청사 출입증 발급 등록기자 : 현재 1,400여명, 상주기자 800여명  
(미국 130여명 상주, 이탈리아 6명 상주)



# 전자브리핑이 도입되고, 정보공개법이 개정됩니다

## Q. 밀실행정·예산낭비 등 언론의 감시기능이 약화된다?

- 출입기자제 관행은 정부·언론간 유착을 조장해 언론 본연의 기능을 위축시킵니다.
- 정부와 언론관계가 투명한 취재환경을 만들어 감시기능은 오히려 강화됩니다.
- 전자브리핑 도입, 정보공개법 개정 등을 통해 정부의 투명성도 높아집니다.

## Q. 전자브리핑제가 취재기회를 오히려 가로막는다?

- 브리핑, 대면·전화 취재 등 현재의 취재지원은 동일하게 이뤄집니다.
-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언론의 개별적 취재와 질의·응답도 가능해집니다.
-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함으로써 지방기자 등도 브리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Q. 정부의 정보공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이 방안은 정부도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공익적 관점에서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취재지원 지침’을 마련해 공무원의 소극적 취재응대를 개선하겠습니다.

## Q. 군소 언론사의 경우 정보접근에서 소외되는 것 아닌가?

- 기존의 인맥 중심 취재에서 절차를 준수하는 취재로 투명화되면 정보접근성이 확대됩니다.
- 모든 매체에 공평한 취재기회가 보장돼 정보불균형이 개선됩니다.
- 합동브리핑센터·전자브리핑을 통해 군소매체에도 취재기회가 폭넓게 주어집니다.



# OECD 가입 27개국 사례

##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기자실이 없습니다

• 표 : 선진국 브리핑실 및 취재지원 현황(OECD 회원 27개국)

국 가	기 관	브리핑실 규모	정례 브리핑	출입기자단	상주기자실	사무실임의방문	개별취재 응대
그리스	정부대변인 산하 통신총국	50석(120석 컨퍼런스룸)	주 5회	없음	없음	불가	대변인 답변
노르웨이	총리실 외교부 · 교통부	150석 · 40석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불가	가능
뉴질랜드	의회 부처	120석 의회 브리핑실	주 1회 없음	의회 기자단	없음	불가	공보관실 경우
덴마크	총리실 부처	50석 없음	주 1회 없음	의회 기자단 없음	없음	프레스 갤러리 등록기자 가능	가능
독 일	총리실 외무부 보건부	210석 60석 50석	주 3회 없음	없음	없음	불가	공보관실 경우
룩셈부르크	총리실	25석	없음	없음	없음	불가	언론담당자 상시 접촉
미국	백악관	60석	일일 브리핑	· 백악관 및 연방 정부부처 기자단(순수 친목)	40명	불가	대부분 공보관실 경유도록 요청
	국무부	57석	일일 브리핑	· 백악관은 외신기자 및 정기 출입기자 대상 특별출입증 발급, 인터넷뉴스 · 블로그 기자 발급 제한	30명		
	국방부	70석	주 1회		50명		
벨기에	총리실 외무부	70석	주 2회 없음	없음	없음	불가	대변인 통해서만 가능
스웨덴	부처	합동기자회견장 (100석 · 86석)	없음		송고 이용	불가	공보관실 경우
스위스	부처(대통령 집무실 없음)	120석 (미디어센터내)	주 1회		미디어센터내 기자실, 송고실, 면담실 등	불가	불가
스페인	총리실 외무부 산업관광통상부	50석 80석 30석	없음	없음	없음	불가	공보관실을 통하도록 안내 (임의답변 불허)
슬로바키아	외교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아일랜드	총리부	60석(의회내)	주 1회				
	외무부 재무부	없음 80석	없음 월 1회	없음	없음	불가	공보관실 답변
아이슬란드	총리실 · 외교부 산업통상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불가	공보관실 협의
영국	총리실	100석 (총리관저 국빈식당)	월 1회(총리) 총리실 공식브리핑 · 주 3회(외신기자협회, 하원 출입 기자, 외신기자 등 대상) · 주 5회(의회 로비 브리핑, 정치부 기자, 로비 저널리 스트 등 대상)	없음 의회 출입기자의 취재 목적으로 "Parliamentary Press Gallery" 명칭의 비공식 모임 있으나, 우리나라 기자단과 성격 다름	없음 (일부 정치부 기자 의회 사무실 상주, 방송사 기자들 은 사무실 임차)	불가	공보관실 경우 (국장급 이하 인터뷰 불가)
			외무부 · 내무부	각 40석	없음		

국 가	기 관	브리핑실 규모	정례 브리핑	출입기자단	상주기자실	사무실임의방문	개별취재 응대
오스트리아	대통령실	80석	없음	없음	없음	불가	불가(공보관실 허가 시 예외적 허용)
	외무부	60석					공보관실 경우
	내무부	100석					
이탈리아	총리실	36석	주 1회(각료회의 후)	의회 기자단	통신기자 6명만 상주, 송고실	불가	공보관실 경우
	외무부	40석	주 1회	없음	50석 규모/ 송고 가능/상주 안함		
일본	총리실	130석	1일 1회(총리, 약식) 1일 2회(정부대변인, 관방장관) 주 2회(내각 공보관, 월·영어/금·일어)	나카다클럽(500명)	70명	불가	가능 (출입기자단 대상 취재응대 가능하나 대응내용 등 사후보고 의무, 출입기자단이 아닌 비회원일 경우 보도과 경우 원칙)
	외무부	70석	주 8회(대신 2회 등)	가스미클럽(388명)	70명		
	방위성	50석	주 11회(대신 2회 등)	방위기자회(255명)	45명		
체코	총리실	60석	주 1회	구성 검토중	있음(브리핑 대기목적) 송고 가능	불가	가능
캐나다	총리실	의회 브리핑실 (100석) 이용	없음	프레스 갤러리 소속 기자단	Hot Room (의회 출입기자단을 위한 공식 기자실) 56개 지정석 및 약간의 임시좌석	불가	공보관실 경우 요청
	외교부						
	자원부						
터키	외교부	133석·60석	주 1회	없음	없음	불가	공보관실 통보·협의
포르투갈	대통령실	30석	없음	없음	상주 불가/송고 가능	불가	Press adviser에게 사전통보, 상급자 승인 필요
	경제혁신부	50석	없음		없음		
폴란드	총리부·외무부 노동부	없음 (필요시 회의장)	없음	없음	없음	불가	가능(민감사안 공보관실 접촉 권유)
프랑스	대통령실	없음	없음	없음	상주 불가/송고 가능 (10여석)	불가	공보관실 협의 (원칙적으로 대변인만 기자 응대)
	외무부	60석	주 2회 전자브리핑제도(월·수·목/기자 질문에 대변인 답변)				
핀란드	총리실	100석	주 1회	없음	없음	불가	가능
	외무부	40석	월 1회				
	재무부	총리실과 공동이용	없음				
헝가리	총리실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불가	공보관실 경우
	외교부	30석					
	교육문화부	30석					
호주	총리실	50석(의회내 기자회견실)	없음	의회내 200여명	의회 상주	불가	총리 및 장관 언론 직접 상대
	외교부						

# 언론도 새로운 시대에 부응해야

## 언론개혁, 기자실부터 고쳐라

“기존의 방법론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언론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 기자실 폐지 후 대안에 대해서는 브리핑룸으로의 전환에 기자와 공무원 모두 큰 공감을 드러냈다.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언론개혁 문제에 대해 기자들의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다.”

한국기자협회 '우리의 주장'  
(기자협회보, 2003. 2. 12)

## 출입처 제도는 담합과 '떼거리 저널리즘' 유도

“출입처와 기자단 운영은 취재의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보도의 본질인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 활동을 제약한다. 즉, 출입처 테두리를 벗어나는 기사의 발굴과 보도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하며 기자들 간의 담합과 자율 검열을 정당화시켜 소위 '떼거리 저널리즘(pack journalism)'을 유도한다. 이런 취재 관행은 결과적으로 '발표 저널리즘'의 가장 큰 문제인 보도의 확실성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김동규 건국대 교수·김경호 국민일보 팀장  
(언론학회 세미나, 2005. 5. 18)

## 한국 기자단, 외신기자들에게 벽으로 다가와

“한국은 공식적으로 브리핑제도가 잘돼 있지만 외신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한국 언론들만의 기자단(press club)이 외신 기자에게는 벽이다. 한국 언론과 외신은 전적으로 다른 독자를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자단은 뉴스를 독점하는 경향이 크다.”

버트 허먼 AP통신 한국지국장  
(신문과방송 2007년 3월호)

## 언론도 새로운 시대에 부응해야

“기자들이 정부가 하는 일을 제대로 알면 되는 것이지, 굳이 기자실을 통해서만 정부 부처를 알고 정보를 알아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처에 기자실을 둘 필요가 없다. 언론도 새로운 시대에 부응해야 한다.”

이호성 성균관대 교수  
(서울신문, 2007. 5. 24)